

【서평】

헤라클레스적인, 너무나 헤라클레스적인 배영수, 『미국 예외론의 대안을 찾아서』

이정진

(서울대)

너무나 생경하게 들리는 역어를 서평의 제목으로 내세우면서 주저함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헤라클레스적인’(herculean)보다 더 맞춤형 단어가 있을 성 싶지 않았다. 영어로 ‘헤라클레스적인’은 주로 임무(task)나 노력(effor)등의 단어를 수식하여, 압도적인 규모의 성취에 대한 감탄을 표하는 데 쓰인다. 이 연구서는 이런 수식어를 너끈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야심찬 성과이지만, 논의의 규모가 지나친 감이 있다. 적어도 학술적 논의에서만큼은 날렵함이 지나치게 대접받아서 안 되겠지만, 학술서의 저자라도 논의의 효율성을 마냥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확실히 이 책은 그런 균형감각의 상실로 인해 독자들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엄연한 실패이지만, 그런 이유로 이 책에 담긴 중요한 성과가 합당한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싶다. 더해서 이 책의 지나쳐 보이는 규모 또한 정당화할 근거가 없지 않은 것이, 그것은 단지 규모에 대한 집착이나 효과적인 논의 구조에 대한 고려의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최대한 모든 관련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는 저자의 자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총체성에 대한 추구가 이즈음의 학문풍토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바, 그

렇다면 이 책의 ‘예정된 실패’는 현재의 지배적인 학문경향에 대한 ‘반론’인 면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저자의 이런 ‘숨은 의제’가 책을 다 읽은 이후에야 드러난다는 것이고, 이 책의 성과를 알리고픈 서평자는 저자를 대신해 우선 이 책의 그런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독자들이 이 책의 독특한 구성에 대비하게끔 권하고자 한다.

이 책을 ‘헤라클라스적’이라고 규정할 때는 이런 취지도 염두에 두었다. 그 어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형용사는 저자의 자세를 잘 요약해 주는 것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화 속 헤라클라스의 과업은 대개 괴물들을, 그것도 혼자 힘으로 처단하는 것이다. 학문 세계에서 전투와의 유비는 다분히 (죽은) 비유에 그치고 말지만 저자는 이 책에서 ‘논쟁’(論爭)의 의미를 오롯이 되살려놓는다. 그만큼 저자는 치열한 자세로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논구하는데, 헤라클레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자 또한 상대해야 하는 ‘적’들이 여간 많지 않을뿐더러 그 많은 ‘싸움’을 외로이 수행한다. 곧 다시 상술하겠지만 저자는 학문적 탐구대상의 선정, 과거 학문 유산의 활용, 학문과 정치의 관계설정 등등의 문제를 두고 최근의 지배적인 학문풍토와 날카롭게 대립하며, 그래서 기존 연구성과에 대한 비판적 점검이라는 이 책의 주된 논의방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식적으로 다양한 최신의 연구 사조를 심문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이런 전투적 집요함을 요하는 이 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미국 예외론의 대안을 찾아서”라는 책의 제목이 말해주듯 ‘기존하는’ 미국 예외론의 극복이다. ‘대안’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바 저자의 의도는 이제는 ‘정치적 정당’(political correctness)이 되어버린, 이데올로기로서의 예외론에 대한 해체 혹은 비판이 아니다. 저자는 미국 문명의 예외적 성격을 실증적인 탐구가 가능한 질문으로 재설정하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과거 미국 예외론이 실상 대단히 공세적인 미국 우월론이었다는 점에서 따옴표가 달려야 했다면 저자는 따옴표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을 넘어 따옴표를 떼고자 한다. 그렇지만 (토크빌이라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가 있기는 해도) 저자 자신이 독자적인 실증적 연구를 통해 미국 문명론을 새로 쓰는 것이 불가능함은 자명하다. 극히 개인적인 미국 경험을 과장된 사변과 버무려 미국 문명론으로 둔갑시키는 사이버 지식 인들에 대한 저자의 경계는 몹시 타당하다. 그 대신 내용은 저자의 방법론은 사실 매우 단순하다.

저자는 기존하는 최선의 학문적 성과를 종합하고자 하며,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저서를 읽고 정리한다. 이 책에는 수많은 저서들의 압축적인 요약이 등장하는데, 무려 65쪽에 이르는 참고문헌 목록은 이 책의 방대한 규모를 단적으로 증거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참고문헌의 책들 중 상당수가 본문에서 치밀하게 논구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600쪽이 넘는 노작이라 하더라도 이게 산술적으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 것이다. 상당한 압축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논구가 가능했던 것은 책들이 원래 참여했었던 연구사적 맥락이 제시되고, 이 지속적인 학문적 대화에 대한 핵심적인 기여분을 중심으로 특정 저서의 성과가 정리되기 때문이다. 이런 작업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학계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 일텐데, 과거의 대다수 주요 연구성과들을 검토한 이후에야 이런 작업이 요하는 너르면서도 주체적인 시각이 확보되는 것이다. 저자는 때때로 스스로 위치선정을 잘못하는 연구서들의 제자리를 찾아주기도 하며, 더 나아가 제도 학문의 경계를 넘어 이질적인 연구사적 전통간의 대화를 주선하기도 한다. 물론 저자의 요약에서 손실분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저자도 인식하는 문제이지만, 아무리 신뢰할 만한 요약도 뛰어난 연구서에 담긴 논의의 풍부함을 희생시키지 않을 도리가 없다. 하지만 적당히 살을 붙여가며 소개하는 대신 논의의 골격만을 드러낼 때 얻는 잇점 또한 분명하고, 저자는 그 잇점을 제대로 살린다. 특정한 연구사적 전통의 전체 지형이 한 시야 안에 들어오면서 그 한계로 작용해온 이념적·인식론적 대전제가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이 책에는 여러 번 이런 통찰의 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책의 핵심적인 줄거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노동계급 형성에 관한 사회사적 연구 전통을 개관한 후에 탐구의 주제를 계급해체로 재설정하는 대목을 꼽을 수 있겠다. 과거의 연구유산에 대한 망각이 부추겨지는 현재의 학문풍토를 생각할 때 저자의 작업은 대단히 드물고, 값진 성과이다. 주지하다시피 ‘60년대’ 이래로 서구의 지성계는 서구 근대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도모했고, 학계 또한 근대체제와의 연루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주지하다시피 이런 비판적인 자기인식이 인문학 전반에 걸쳐 과거 학문 전통과의 급격한 단절을 가져왔는데, 이 책을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통칭되는 새로운 학문 경향이 역사학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듯하다. ‘60년대’ 이래로의 새로운 역사학의 사조들은 대개 급진적인 탈근대적 의제를 내세우고, 방법론적으로도 근대적 과학성에 대한 해체를 도모하는 듯하다. 저자는 이런 새로운 사조의 성과(특히, 인종에 대한 반본질주의적 논의)에 대해 개방적이고자 하지만, 학문적 객관성(자체도 과격한 반-근대주의자들에게는 근대적 지향으로 분류되었지만)에 저해가 되는 경향성이나 교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한다. 특히 저자는 인간 주체성을 ‘선택적으로’ 부정하는 구(조)성주의적 연구 경향에 대해서 신랄하며, 직접적인 정치적 효과를 겨냥하는 듯한 연구들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의 근거를 따져 묻는다. 이렇듯 현재의 학문연구를 추동하는 저변의 정치적 감수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해서 저자가 고루한 ‘전통주의자’ 내지는 ‘순수 학문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저자가 양식있는 학자들에게 부정의 대상이 된 지 오래인 예외론의 유효성을 예증하려고 하며, 이런 작업에서 기존 예외론에 침윤되어 있는 연구성과들을 활용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저자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성과 중에서 이데올로기로 환원되지 않는 측면의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며, 결정적으로 저자가 새로이 구성하는 미국 예외론의 내용은 비교사적 관점에 기반함으로써 구조적으로 학문적 중립성을 확보한다. 더불어 학문적 자율성에 대한 저자의 신념은 정치화된 학문적 풍토에 대한 비판이기에 앞서, 정치적 당위를 내세우기보다는

학문적 방법론에 철저했을 때 오히려 실질적인 쓰임새가 있는 지식이 생산된다는 생각에 근거하는 듯 하다. 이런 입장은 정책적 함의가 큰 15장, ‘세계화의 문화적 함의-한국 기업문화의 변형’를 보면 수궁이 간다. 저자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대외개방의 수준과 범위를 둘러싼 그간의 논의가 간과해온 중요문제인 낮은 생산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그 결정적 요인인 한국의 독특한 기업문화에 대한 합당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책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책이 제시하는 미국 예외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를 미뤘었다. 앞서 ‘술거리’라는 말을 써서 이 책이 기존 연구성과들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독자적인 의제에 따라 구성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기는 했다. 의당 서평이라면 그 점부터 짚고 시작해야 할 터인데, 방법론이나 저자의 태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그 우선적인 과제를 한참이나 뒷전으로 밀어둔 것에 대해 변명이 필요할 것 같다. 솔직하게 밝히자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필자가 이 책의 서평자로서 최적임자는 아니라는 염려가 없지 않다. 미국문학 전공자인 필자는 저자와 독자 모두에게 대화를 걸 수 있는 이상적인 서평자는 아닌 것이다. 다만 필자는 이 책의 성취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고, 독자를 상대로 그 점을 납득시키는 일을 주된 임무로 삼았다. 사실 이 책을 읽는 내내 서평 쓸 일이 계속 걱정이었는데, 복잡다단하게 전개되는 다양한 논의의 갈래들을 큰 왜곡없이 간추리는 것만도 버거운 과제처럼 보였다. 독서의 진도가 나갈수록 정리의 부담감이 쌓여갔다면 최근의 학문풍토에 대한 저자의 문제의식은 읽는 내내 통렬하게 다가왔고, 실용적이면서 원칙적인 자세로 다양한 연구사조들의 성과들을 그 이데올로기적 편향과 분리하여 종합함으로써 객관성과 총체성을 지향하는 근대적 학문 모델을 납득시키는 저자의 실력은 감탄을 자아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서평의 구성은 역부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배운 우뚝한 학문적 성취에 대해 무언가 의미있는 발언을 해

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되었다. 더불어 이 책에 담긴 내용이 미국사나 미국학, 혹은 역사학 분야를 넘어 인문학 전반에 걸쳐 참조할 가치가 있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었다. 이 책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서평은 차후에 전문적인 역사 연구자들에게 기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역사학 이외에도 워낙 많은 연구분야가 검토되는 까닭에 이 책의 논의 전체를 한 두 사람의 서평자가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된다. 필자가 이 책의 첫 번째 서평자인데, 부디 여러 분야에서 이 책의 진가를 알아보는 연구자들이 나타나서 이 책을 매개로 풍부한 학제적 논의가 전개되었으면 한다.

그런데 이 책이 더 많은 독자를 만나자면 도입부의 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 이 책의 도입부는 여타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한데, 독자들이 이 정도 규모와 밀도를 지닌 책을 읽기 위해 필요한 인내를 각오하자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첫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 책의 전체 구성을 소개하는 서문에서는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은, ‘시각’, ‘시야’, ‘접근방법’ 등의 다소간 지나치게 경험적인 용어로 책의 방법론을 규정하려는 것이 문제이다. 책에 대한 인상을 결정짓는 대목에서 저자는 최신의 학문적 어법에 대한 반감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좀더 이론적인 어휘들을 구사하여 신세대 학자들을 유혹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다. 예외론의 역사적 기원과 그 담론의 구조적 특성을 논하는 서론은 언뜻 보면 사회사에 초점을 맞춘, 이후의 보다 구체적인 논의들과 겹돈다는 느낌을 주며, 더 중요하게는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는 몇몇 대목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저자는 예외론의 중요 가닥을 이루는 청교도 사명론이 “아메리카의 특수성을 [...] 아메리카의 내적 본질에서 찾았다”(41쪽)고 단언한다. 하지만 사명의 장소가 사명의 성격을 결정짓는다고 보기는 어렵지 쉽다. 그 유명한 ‘언덕 위의 도시’ 비유의 강조점도 구세계를 ‘관객’으로 둔, 신세계 주민들의 강한 자의식을 드러내는 ‘도시’ 부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자가 예외론적 담론에서 인종주의가 누락되는 것을 유럽중심주의와 결부된 맹점으로 규정할 때, 위선적인 이데올로기에 인식론적 한계라는 알

리바이를 부여하려 한다는 (의도치 않았을) 인상을 주기도 한다. 본격적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1부 ‘노동계급’부터는 이런 대목들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을 보면 도입부의 문제는 여타 장들에서와 같은 철저한 숙고를 거치지 않은 탓으로 짐작된다.

두어번에 걸쳐 이 책을 통독한 소감으로는 이 책의 핵심적인 ‘줄거리’ 정리가 독자들에게 꽤 유용한 독서의 길잡이가 되리라는 판단이 든다. (미루고 미루다 이제야 이 책의 독자적인 의제를 소개해려는 것인데, 그 저 서평자의 의무에 대한 ‘면피’가 되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필자의 독서실감에 의하면 독자들은 이 책의 너무 조밀하고, 너무 포괄적인 논의에 길을 잃는 느낌을 받기 쉬운 것이다. 사실 저자도 이 문제를 의식하여 곳곳에 길잡이를 배치해 두었다. 서문에서 저자는 논의의 초점으로 삼는 예외론적 주제와 그 선정의 타당성을 소개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예외론 일반의 구조를 교정하는 최종적인 논의에 이르는 경로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저자는 책을 논의의 큰 덩어리에 따라 3부로 나누고, 새로운 부가 시작할 때마다 앞선 논의를 정리하고 이후 논의의 개요를 정리해 주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저자의 길안내는 이 책을 구성하는 모든 장들의 긴밀한 상호관련성을 강조하기에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는 전체 논의의 속도에 갑갑증을 느끼는 독자에게 셋길이나 지름길의 가능성을 말해주지 않는다.

일단 필자는 앞서 언급했듯 1부의 논의를 끝맺은 5장, ‘미국 노동운동의 특색’이 전체 논의의 축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이 장은 미국에서 더욱 진전된 형태로 나타나는 노동계급의 해체 현상을 기준으로 미국과 여타 국가를 비교하는 작업의 타당성을 설득한다. 저자는 이념적 진영에 따라 미국의 우월성 혹은 후진성의 증표로 여겨져온, 사회주의 운동의 부재 문제를 뒤집어 실증적 탐구가 가능한 비교사적 질문으로 되살리는 것이다. 이렇듯 고전적인 예외론의 한 갈래를 탐구주제로 선정할 때 저자가 노린 것은 풍부한 기존 연구성과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학술적인

이점과 함께, 비교사적 탐구에 적합한 계급현상의 보편성일 것이다. 물론 이 책에서는 계급 해체 현상을 다루고 있기에 대개 계급형성을 전제로 한 기존 연구들을 이에 맞춰 재구성해야 하고, 더불어 계급 해체가 여러 국가에 걸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바로 그런 작업이 1부의 앞선 장들에서 이루어지는데, 2장 ‘계급의 개념’에서는 역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계급 개념이 정련되고, 3장 ‘노동과정-테일러주의를 중심으로’에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강화되게 마련이라는 맑스주의적 테제의 교조성을 밝히며, 4장 ‘주거공간’에서는 저자의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주거환경을 계급 정체성의 유지에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계급해체 현상에 접근하는 풍부한 관점을 확보한다. 이런 앞선 논의들이 5장의 통찰로 수렴되는 것은 맞지만, 저자의 철저함은 간혹 지나쳐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그 자체로는 큰 지적 흥미를 불러일으키지만 4장에서 공간 개념에 대한 원론적인 차원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이 책의 독서는 앞선 논의가 스며들어 있는 5장에서 시작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도 하며, 어쩌면 이 책의 예외론적 논지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인 독자에게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권장할 만한 독서법일 수 있겠다.

마찬가지 이유로 2부, ‘계급과 국가’에서도 중간 장들을 건너뛰고 9장, ‘노사관계의 변형’과 10장, ‘노사관계의 새로운 양상’으로 직진하는 것을 시도함직 하다. 노동운동의 성숙화와 더불어 진행된 노동권 보호장치의 제도화가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쇠퇴를 상쇄하는 현재의 정세를 개관하는 이 장들은 내용상으로 5장과 바로 연결된다. 물론 저자가 (2부를 따로 둔 이유이며)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바 결국 노동 계급의 부침은 다른 계급과의 세력관계를 변수로 하기에 9, 10장의 내용은, 기업가를 중심으로 부르조아 지배가 일찍 확립된 미국의 독특한 권력구조 형성에 대한 앞선 논의 속에서 더욱 풍부해짐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논의의 포괄성은 지나쳐서 저자는 엘리트 관련 논쟁(6장, ‘엘리트와 권력구조-파워

엘리트 논쟁에 대한 재검토)과 기업사 연구(7장, '기업가-미국 기업사 연구에 관한 제언)의 전개 과정 전체를 개관한다. 이렇듯 5장, 9장, 10장을 핵심 줄거리로 하는 이 책의 논의는 이 장들에서 산발적으로 해당 현상에 대한 유럽쪽 자료와 대비되면서 미국은 계급현상에서 유럽의 변화를 예고한다는 논지를 이끌어낸다. 이런 잠정적인 주장은 결론에서 기존 예외론을 대신해 미국과 여타 세계와의 관계를 '극단' 혹은 '첨단'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는 제안을 낳는다. 이 새로운 예외론 혹은 예외론의 대안에 대한 평가는 필자의 능력 밖이라고 앞서 밝혔지만, 미국의 제국적 위상과 유력한 근대 모델로서 미국적 제도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 책의 풍부한 논의와 저자의 최종적인 논지는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중요하게 토론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3부, '미국과 세계'의 내용은 각별히 주목을 끄는데, 앞서 언급한 15장 말고도 3부에 수록된 여타 장들 또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담고 있다. 사실 노동계급을 억압하는 데 인종기제가 활용되는 방식을 밝힌 백인성 연구자들의 성과를 소개하는 11장, '미국의 인종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말고는 3부의 다른 장들은 이 책의 핵심 논지와 아주 긴밀하게 엮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줄곧 비교사적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해왔기에 그런 이해를 진작시키는 자신의 연구들을 이 책에 포함시킨 저자의 취지는 이해가 되며, 그런 구성의 논리를 떠나서 2부의 내용은 그 자체로 일반 독자들에게도 흥미있을 만큼 작금의 정치경제적 이슈와 닿아 있다. FTA 비준과 관련하여 국가전체가 큰 흥역을 치루고 있는 시점에서 제국의 학술적 용례를 따지는 중에 미국 대외 전략의 구조를 밝히는 12장, '미국 제국론'과 군사력과 더불어 미국 대외 전략의 주요한 수단이 되어온 경제기구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13장 '세계화의 제도적 토대'는 모두 국가적인 중요성을 띠는 사회적 토론에 긴요한 지적 자산이 되어 줄 것이다.

대안적인 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책의 독특한 편성을 소개하다 보

니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현재의 ‘형태’가 이 책에 담긴 방대한 지식과 값진 논의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최선의 것이 아니라면? 만일 그렇다면 분책도 고려할지 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저자가 주밀하게 짜놓은 현재의 구성과 친절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책의 규모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긴밀하게 엮이는 내용별로 여러 권의 책을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며, 책을 다 읽고 난 소감으로는 이런 총체적 접근이 제공하는 잇점에 대해서도 수궁하게 되는 면이 있다. 다만 역작이라는 말에 값하는, 방대한 규모의 학문적 성과를 더 널리 유통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한 번 제안해 본 것인데, 저자 자신이 직접 쓴 발문에서 책의 구상이 계속 바뀌어간 경위를 밝히고 있기에 필자 또한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